

통합 특별법안 윤곽…자치권 확대 등 8편 24장 314개 조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12일 나주 동신대학교 내 전남연구원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강위원 경제부지사 등 협의체위원들이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I·에너지 미래산업 보장 등 광주·전남 의지 담은 매머드 법안

15일까지 내용 수정…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광주·전남 대통합을 뒷받침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항이 담긴다. 광역교통망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채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 8편 24장에 달하는 특별법의 뼈대도 공개했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의 의지가 담긴 매머드급 법안으로 구성됐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총 7장 296개 조문인 점과 비교하면 광주·전남의 법안은 314개 조문으로 내용 면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법안은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제2편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및 운영,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4편 교육자치,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7~8편 보조 및 별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자유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을 명시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제3편 자치권 강화 부문에서는 자치행정과 자치정, 자치경찰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특별시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시장 직속으로 '특별시소방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격상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역시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인사권을 강화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산업 특례도 구체화했다. 제5편을 통해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 산업 육성은 물론 에너지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농수축산업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광역교통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빼곡히 채웠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인허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대폭 이양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환경부 장관의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중앙의 규제에서 벗어나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개발을 가능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및 방산 클러스터 구축 지원, 첨단전략산업 메가샌드박스 지정,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 권한 위임 등 산업과 SOC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핵심인 재정 특례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지방교부세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광주·전남은 이보다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제6편은 시·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종전 전남권역에 의과대학과 전남 동·서부 부속 병원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넣어 의료 격차 해소 의지를 담았다.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시가 직접 출자하여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이날 출범한 추진협의체는 오는 15일까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법안 문구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

안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린 개괄적인 내용이라면, 이번에 준비 중인 법안은 구체적인 각론과 특례를 담은 실질적인 통합 법안"이라며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거나 내용을 하나로 합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8편 24장 314개 조문의 큰 틀은 잡혔으나 세부 내용은 15일까지 지속해서 수정될 것"이라며 "AI와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관련 조항은 변동이 없겠지만, 재정 특례 기간이나 방식 등은 정부와의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6일 법안의 발의 전까지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논의를 거쳐 광주·전남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추진협의체는 오는 15일까지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이 검토후 16일 공동 명의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자 노트

행정통합 대의와 '광주' 시대정신



정 병 호
정치부 기자

의 행정통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 편의주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 인권 도시 광주'라는 브랜드를 희석시킨다면, 빼아픈 실책이 될 것이다.

마산은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발원지로서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자부심이 커다. 그러나 창원시로 통합되며 그 이름이 삭제되자 지역민들이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감은 예상 보다 커고, 갈등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행정 구역은 합치되자 그 지역이 가진 역사적 맥락까지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오는 16일이면 광주전남의 통합명칭을 포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다.

시도민은 통합이 가져온 경제적 시너지와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주문하고 싶다.

통합된 거대 자치단체 안에서도 '광주'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과 역사성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윤전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폐지되고 단순히 '광주전남'이라는 물리적 결합체로만 남는다면,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형성된 세계적인 민주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는 사장될지도 모른다.

'오월 광주'는 세계기록유산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통합의 대의를 따르되 그 그릇에 '광주 정신'이라는 알맹이를 어떻게 훼손 없이 담아낼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광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안에 지혜가 담기길 고대한다.

/jusbh@kwangju.co.kr

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결과 공유, 협의체 운영계획,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시·도 시 마련 중인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와 범시도민 행정통합 협의회 구성도 논의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사 말을 통해 "협의체는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 골격 안을 만들어 시도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역할을 맡는 중요한 기구"라며 "광주·전남 대통합은 역사에 없는 양 시도의 결단으로, 시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이상찬 목포대 대외협력부총장, 허재선 순천대 사무국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선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체 첫 회의는 지난 9일 이재

지중화공사 구간 확정 공고 안내

영암군 교동지구 지중화 확정 지역 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① 지중화공사 목적

: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② 지중화 확정 지역

: L = 12.8km(영암읍 교동리 88-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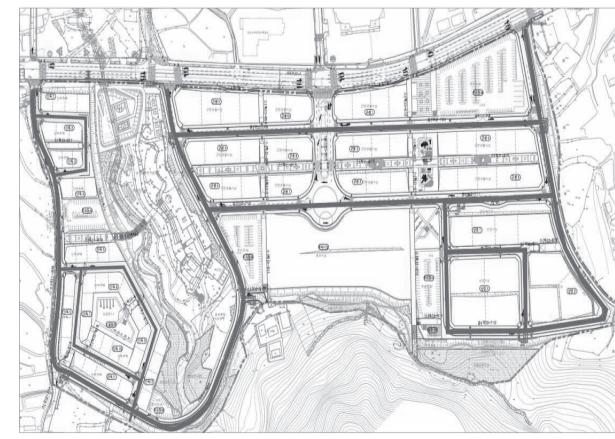
③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6. 3 ~ '26. 9 (7개월)

④ 신·증설 고객 지중화 공급 시행 기준일

: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⑤ 기타 문의사항 영암지사 전력공급부(☎ 061-470-3234)

※ 지중화 확정 지역 위치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영암지사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내 최초 렌탈공급 등록 업체



DB
1억원 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120251388541
장애인 인증: 제2024-089

주요 공급 대상

- ▶ 초·중·고·대학교, 각계 정부기관, 군부대, 종교
- ▶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기업, 삼성, LG, SK 등 기자
- ▶ 교실, 강의실,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업의 강점

- ▶ 국내 최초 렌탈 및 정부조달 방식으로 무한 수익창출
- ▶ 교육기관 및 행정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단체, 대기업
- ▶ 시장 안전성, 지속적 성장 특별 초기 참여분께 우선권 제공

창업 기회대상

- ▶ 다년간 행정 공공기관 및 교육관련 유사 직종 퇴직자
- ▶ 교육 행정기관, 군부대 근무 종교단체 지역 기반 경력자
- ▶ 조직관리 지역총판, 새로운 창업 희망자 우대

엠케이솔루션(주)

연락처 : 010-2366-8843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 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 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하였는데,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계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주식회사 명성기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2번로
39(하남동)
청산인 오기상

74년을 밟은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광 266-1020 ● 북광주 525-3761 ● 신안 571-7658 ● 오지 266-7601 ● 용 433-1503 ● 우산 433-1503
● 동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225-6001 ● 중 222-9054
● 남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 673-68